

“계층별 수급 균형 맞는 주택정책 마련을”

지방 부동산 정책 지자체에 넘겨라

③ 공공임대 질 높이고 투기 방지

광주시가 지역 내 주택의 공급 규모, 시기, 종류 등을 결정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조율·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급 위주의 지역 부동산 시장이 토지소유주, 건설업체, 투기세력 등을 중심으로 ‘분양가 부풀리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실수요자, 저소득층 및 중산층 등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주거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1년 2020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한 광주시는 조만간 새로운 주택종합계획 수립에 나설 방침이다. 2020년 주택종합계획이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과도한 공급에 초점을 맞춰 작성됐기 때문이다. 2020년 목표인구를 59만6542가구 155만명으로 산정해 추가 주택 수요를 12만1000호에 달하는 주택 4만5000호 등 16만6000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단독·다가구가 5만3000호, 아파트가 10만2000호의

임대 비율 타 도시보다 높지만 위치·시설 등 민간보다 미흡
면적 29~39㎡ 불과 저소득층 대상 공급

지역특성 맞는 미래지향적 주거기준·환경 등 수립해야

공급을 목표로 한 것이다. 인구 감소, 1인 가구 급증 등을 감안하지 못한 공급 위주의 주택계획은 고층·초고층 아파트의 신속한 인허가의 근거가 됐다.

2011년 1월말 913개 단지 33만8556호였던 아파트는 7년 뒤인 2018년 1월말 1061단지 39만5121호가 됐다. 148개 단지 5만6565호가 증가했다. 현재 56개 단지 2만9736호가 시공중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8~9년 사이 8만6301호의 주택이 광주에 공급된 것이다.

여기에 ‘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정비예정구역 내 4만여호의 아파트, 택지·도시개발사업으로 3만여호, 지구단위계획 등에 의한 소규모 공급 2만여호 등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 2020년 공원 일몰제에 의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도시공원에도 아파트가 신축된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2020년 이후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의한

아파트 공급 규모는 5만~5만8000호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수요 감안 없는 아파트 공급은 ▲구도심, 노후 아파트 단지 ▲주거 양극화 ▲핵심 일직선 경관으로 광주 정체성 상실 ▲고령화·인구 감소·1인 가구 증가 등 대응 미흡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공공임대의 질적 향상과 지속적인 공급도 시급하다.

광주의 임대주택 비율은 15.77%로, 부산(12.51%), 대전(12.17%) 등보다 높지만, 공공임대의 면적이 29~57㎡에 불과한 데다 위치·시설 등의 측면에서 민간아파트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공급된 임대아파트의 면적은 29~39㎡에 불과해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30년 전과 똑같은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

는 시점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최저주거기준, 주거 환경 수준, 주택 규모 등을 마련해 미래지향적 주거지 관리 방안과 도시정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중앙집권적·양적인 주택공급 중심의 부동산 시장을 혁신해 주택유형별, 가구특성별 주택 수요를 파악해 공급에 나서 계층별 수급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주택 공급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경수 광주대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과 교수는 “앞으로 주거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도시의 경쟁력을 의미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주택정책은 전면 수정돼야 하며,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주거 정책을 지자체가 직접 마련해 지역 주택 시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광희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부장은 “지역여건을 전혀 감안하지 못한 불합리한 부동산 및 주택정책으로 인해 지역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중앙정부가 과연 지자체에 주택정책 및 공급 등을 위한 권한을 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고 있

“옛 도청복원 청와대가 직접 챙긴다”

오월어머니회 靑 앞 농성 풀어 정무수석 보고라인 구축키로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인 옛 전남도청의 복원을 요구해온 오월어머니회 회원들이 청와대 앞 농성(광주일보 6월 27일자 7면)을 나흘만에 풀었다.

회원들은 지난 26일부터 머리카락을 자르고 단식과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1일 옛 전남도청 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월어머니회 회원 7명과 대책위 황성호 상항실장은 이를 전부터 이어진 청와대 관계자와 면담을 마치고 농성을 끝냈다.

황 실장은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국무총리,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약속한 옛 전남도청 복원을 청와대가 직접 챙기기로 했다”며 농성을 풀 이유를 밝혔다. 또 “대책위 상항실-청와대 행정비서관-정무수석으로 이어지는 보고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형 기초보장제’ 이달부터 시행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주민

광주시는 2일부터 지역의 여건과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지역형 사회복지서비스인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올해는 시비 15억원을 투입해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1000여 세대를 발굴하고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반영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1일 시에 따르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다 10% 높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로 재산기준 9500만원, 부양의무자 재산 3억원 이하의 주민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 대상자는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미 탈락가구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가구와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25만6000원, 3인 가구 33만1000원, 4인 가구 40만6000원 등으로 1인 가구는 국민기초수급자 급여지급액 기준의 40%를, 2인 이상 가구는 30%를 매월 30일 정점으로 지급하며 신청은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김오성 시 사회복지과장은 “광주형 기초보장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고독사와 위기상황으로 내몰린 비수급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새로운 제도”라며 “어려움에 처한 주민이 혼자서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수혜자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김 산업 호조’ 전남 수산가공품 생산량 급증

지난해 34만1천t

김 산업 호조에 힘입어 전남 수산 가공품 생산량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 수산가공품 생산량은 2015년 23만8000t, 2016년 32만8000t, 지난해 34만1000t을 기록했다. 전국 대비 생산 점유율도 2015년 19%, 2016년 21%, 지난해 26%로 높아졌다. 이는 물김 생산과 수요 증가에 따라 마른 김 생산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인 것으로 전남도는 분석했다.

지난해 물김 생산량은 38만3000t으로 전년보다 7만2000t(23%) 늘었다. 가공품인 마른김 생산량도 12만3000t으로 전년보다 4만4000t 늘었다.

김 상품종 보급 등 전남도의 지원도 한

몫했다. 전남도는 신규 품종 해풍 1호를 개발해 보급했으며 지난해까지 3년간 김 양식어장 9896ha를 새로 개발했다.

2004년부터는 2774억원을 들여 마른 김 등 신규 가공업체 시설 건립을 지원했다. 2015년부터 위생 개선을 위해 153억원을 들여 마른 김 가공업체에 가공용수정수시설을 지원하는 등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힘써왔다. 올해도 수산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수산 가공업체의 설비 개선, 위생시설 확충 등을 위해 380억 원을 투입한다.

양근서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김 외 품목도 현대화된 가공시설 지원 확대 등으로 경쟁력을 키워 전남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표류하는 난민들 “SOS”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리비아 인근 지중해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표류하던 난민들이 스페인 구호단체 프로악티바 오픈 암스 대원들에게 도와달라며 손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원형 보존, 기억관 조성 추모·교육장으로”

세월호 선조위, 진도·안산·목포 등 거지 후보지 선정

세월호 선체를 손상된 그대로 보존해 전시하면서 별도 복합관을 마련해 희생자를 추모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공간으로 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세월호의 닻 등을 떼어내 세월호 참사의 상징물로서 전국에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후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타타워에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국민공청회’를 열고 그동안 선조위가 검토한 다양한 선체 처리 방안을 소개했다.

정현목 선조위 조사과장은 이날 ‘세월호 선체보존처리 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체는 손상된 상태로 원형을 보존하고

별도의 복합관을 건립해 기억·교육·추모·치유 등 통합기능을 하는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오는 20일께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거지 후보지로는 목포, 진도, 안산 대부도 등 3곳이다.

목포에 선체를 보존하는 경우 현재 세월호 거지 장소에서 2km 떨어진 목포산항 배후부지에 선체를 거지하고 3500㎡ 부지에 별도

건축물을 지어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세월호가 침몰한 진도 팽목항 인근 서망항도 거지 가능 장소로 꼽혔다. 서망항 인근에는 2021년 개관을 목표로 국민해양안전관이 들어서는데, 이와 연계해 대부도와 마찬가지로 복합관을 마련하고 선체를 이용하자는 계획이다.

소요 비용은 목포의 경우 428억원으로 추산됐고, 안산 대부도와 진도 서망항은 세월호 선체 이동을 위한 준설 공사가 필요해 각각 1155억원, 73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김현영 기자 young@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새로운
소리를 듣다'

선배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동배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새배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넉배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대: 430-8801

농촌의 새로운 희망

농림축산식품부
 에너지관리공단
 농협

농촌 태양광 농업진흥구역 규제완화

대통령령 제28838호, 년 1.75% 가능

직접 운영하실 분 ▶

땅만 빌려주실 분 ▶

- 땅만 있으면 발전 설비해 드립니다.
- 원금, 이자 빠고 8~10% 가능
- 20년후 기부체납 (임대비 선불로 드립니다)

햇빛 농사 태양광이 효자!!

- ▶ 정부에서 보장하는 안정적 투자
- ▶ 200KW설치시 연금처럼 월 500만원 교박교박 (25년동안 년평균 6,000만원)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믿음 · 신뢰

(주)해가온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